

저서출간 신문기사 (인터뷰 및 해설기사)

<한국일보> 저서출간 인터뷰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20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2062108560003731>

<국민일보> 저서출간 기사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 202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2752>

<주간경향> 저서출간 인터뷰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 202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202181358021>

<한국일보> 저서출간 인터뷰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20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11572395360>

<한겨레> 저서출간 인터뷰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2009)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348773.html>

<교수신문> 압축적 근대성 관련 출판 소식 모음

<한국일보> 저서출간 인터뷰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20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2062108560003731>

한국일보_민주주의 위기 부른 자유주의 빈곤...압축적 근대화의 결과

민주주의 위기 부른 자유주의 빈곤..."압축적 근대화의 결과"

입력 2022-06-21 19:00 수정 2022.06.21 20:28

최근 학계의 화두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자유주의 부재다. 과거 권위주의 청권뿐만 아니라 민주정부를 자처한 민주화 세력 역시 민주적 질서를 전전시키지 못하고 위기에 빠뜨린 것이 자유주의의 빈곤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봉쇄하는 '문자 폭탄' 행태나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진영 대립 등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경시했던 후과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특정 세대 용퇴나 책임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은 근대화의 특징에서 비롯한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아닌 한국의 근대화 과정 연구에 천착해온 서울대 장경섭 사회학과 교수의 '압축적 근대성' 이론이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연구를 집약한 학술서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를 지난 4월 영국에서 출판한 장 교수를 최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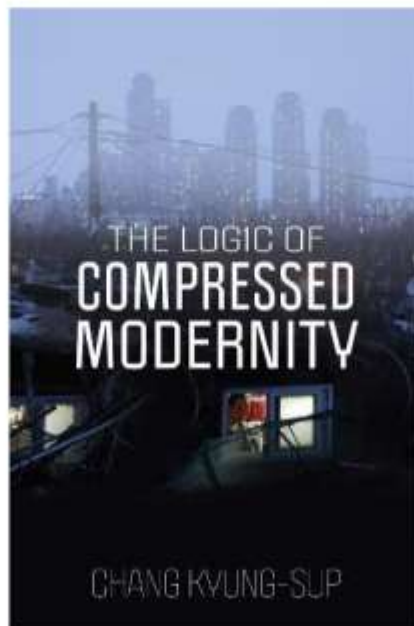
한국 근대화 과정에 대한 20여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저서를 해외에서 출간한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압축적 근대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서구 제도가 순간이동...동도서기가 아니라 무도서기"

장 교수가 고안한 개념인 '압축적 근대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처럼 급속하게 발전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의 저서가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설립한 출판사 '폴리티 프레스'를 통해 출간된 후 중국어와 프랑스어, 아랍어 번역본과 미국 출간을 앞두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따르면 탈식민 국가들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시공간적 압축이 나타난다. 선진국이 2, 3세기 동안 달성한 산업화를 한국이 반세기 만에 이룬 것은 '시간적 단축'이다. 한국이 건국과 동시에 서구의 문명적·기술적 요소를 들여온 것은 '공간적 압축'이다.

문제는 오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제도가 1948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이식됐다는 점이다. 장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가 순간 이동해서 한국에 탁 들어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출범 당시 제도적으로는 세계에서 맨 앞줄에 선 근대국가로 선포됐다"며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제도를 뒷받침하는 물질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제도를 도입하고 결정까지 주도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움직일 공간은 좁았다. 자유주의가 자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 근대화의 최대 모순은 자유주의 제도가 시민사회라는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서구 자유주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시민사회의 자유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민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권위주의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역공학적으로 분해한 뒤 베껴서 한국에 도입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었지만 지식과 제도가 한국의 역사적 정신이나 문화적 맥락과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없었다"며 "한국의 근대화는 동도서기(東道西器)가 아니라 '무(無)도서기'라고 꼬집었다.



앤서니 기든스가 설립한 출판사인 폴리티 프레스가 지난 4월 영국에서 출간한 장경섭 교수의 저서 '압축적 근대성의 논

"모든 분야에서 정상 부패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자)'에 치우친 것도 압축적 근대성과 연관이 있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자유주의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제도의 빈틈을 채웠는데 학벌주의가 대표적 요소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학이 서구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대학이 국가 지향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은 시민 중심의 자유주의 체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자유주의 부재뿐만 아니라 부패도 구조화됐다는 게 장 교수의 분석이다. 제도가 원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과 탈법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패가 특정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이란 의미에서 그는 '정상 부패'라고 불렀다.

"적폐청산으로는 한계...지식인들 역할 해야"

적폐 청산이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정상 부패에 동참하지 않으면 경쟁도 어렵고 국가에 불편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이중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다. 모든 섹터(분야)가 잠재적 소추 대상이 된다"면서 "적폐청산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적 처벌이 된다. '운이 없어서 나만 걸렸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잘못이 드러난 인물들은 처벌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이중적 질서, 정상 부패를 포함한 질서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도 현재 상황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들은 정치로 풀 수 없는 것도 정치화하는 측면이 있다. 어떤 사회든 범사회적 문명 운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근본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국민일보> 저서출판 기사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 202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2752>

“한국은 일종의 멀티플렉스 극장사회”-국민일보

국민일보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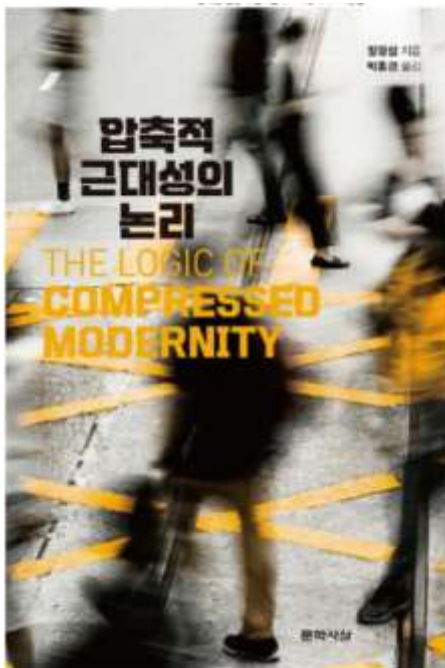
취소

“한국은 일종의 멀티플렉스 극장사회”

입력 2023-11-30 19:08



BTS 멤버 제이홉이 지난 연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 공연을 하고 있다. K콘텐츠는 한국이 갖는 압축적 근대성의 문화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공감을 얻는 것은 압축적 근대성이 세계의 보편적인 경험이자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박 히트뮤직





서울 마포대교 야경. 게티이미지

[책과 길]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
 장경섭 지음, 박홍경 옮김
 문학사상, 364쪽, 2만원



한국을 설명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게 ‘압축적 근대화’다.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뤘고, 압축적 근대화 때문에 사회가 미성숙하고 혼란스럽다는 식이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도, 한국이 살기 어려운 이유도 압축적 근대화로 설명하곤 한다. 그런데 압축적 근대화란 정확히 무엇인가? 압축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이고, 압축이 초래한 문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책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는 이 질문에 답한다.

장 교수는 먼저 압축적 근대화는 한국이 전형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탈식민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압축적 근대성과 그 세부 특징들은 사실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거나, 특히 동아시아 각국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며” 압축적 근대화는 경제나 정치만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현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K콘텐츠는 한국이 갖는 압축적 근대성의 문화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K콘텐츠가 세계적인 공감을 얻는 것은 압

축적 근대성이 세계의 보편적인 경험이자 현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지난해 영문판으로 먼저 출간된 것도 압축적 근대성 이론에 대한 세계 지식계의 관심을 보여준다. 앤서니 기든스가 창립하고 피에르 부르디외, 올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등 최고 사회학자들의 저작을 출판해온 영국의 폴리티 출판사가 한국 학자 원작으로는 처음으로 이 책을 출간했다. 한국 사례에서 출발한 압축적 근대성이 현대 세계를 설명하는 근대성 이론으로 제출된 것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압축은 시간·공간 영역에서 단축(축약)과 압착(복잡화)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 한국에서 시간 단축은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된 경제개발을 토대로 저임금 농업 경제에서 선진 산업경제로 옮겨간 것을 말한다. 한국과 세계와의 공간 단축은 20세기 외세 지배와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가속화되었다. 시간은 단축되면서 압착되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 근대적, 탈근대적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다. 공간 역시 압착되어 해외·다국적·세계적 요소가 한국의 국내적·토착적 요소와 섞이게 되었다.

“과거, 현재, 아시아(한국), 서양의 가치와 이념이 병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질서는 ‘지나치게 역동적’이며 지나치게 복합적이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압축적 근대성은 민족, 국가, 시민사회, 국가경제 같은 큰 단위 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체, 가족, 개인 등 다양한 단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찰된다.

압축적 근대성은 여러 근대성과 근대화 주체가 공존하고 경합하는 다중 근대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해 이식된 식민지 근대성이 잔존하고, 해방 이후 주로 미국을 기준으로 한 제도주의 근대성, 개발독재시대의 국가자본주의 근대성, 신자유주의 시대

의 세계주의 근대성이 공존한다.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유교 기반의 신전통주의 근대성, 시민 저항의 역사에서 형성된 자유주의적 민중 근대성도 나타난다.

저자는 “한국은 일종의 ‘멀티플렉스 극장사회’로의 성격을 띤다”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온갖 가능한 모든 근대성 주장들이 공격적인 방식을 통해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때로는 순차적으로 사회라는 무대에 올려진다”고 썼다.

압축적 근대성은 문화적으로는 복합문화체제로 나타난다. 복합문화체제는 K콘텐츠의 핵심이다. “대중문화 장르에 담긴 ‘한국성’에는 한국에서 아시아, 서구, 세계 또는 전통에서 근대, 후기 근대, 탈근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문명 요소들이 한국의 삶의 경험이나 감정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복잡성이 있다.”



저자는 압축적 근대성의 문제적 측면도 조명한다. 그는 압축적 근대성은 경제생산을 극대화하느라 사회재생산을 희생시켰다며 “압축적 근대성이 압축적 (경제) 성장과 압축적 (사회) 박탈의 조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압축적 근대성은 또 가족을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하며 가족의 희생에 크게 의존했다. 가족이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한 노동력을 제공했고 교육을 뒷받침했으며, 복지국가를 대신해 가족 복지를 제공했다.

압축적 근대성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재생산 위기를 초래했다. 결혼·출산 기피, 돌봄과 복지의 취약성,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늘어나는 부채 등이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가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족 기반 사회 사회재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재생산 위기의 강도와 복잡성은 모든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성공적인 경제개발이 수십 년 이어진 후 이러한 경제생산과 사회재생산에 대한 불균형적 접근은 어떤 합리성이나 도구성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시민권 확립해야 엉망진창 정치 바꿀 수 있다”

입력 2022.02.18 13:58

수정 2022.02.21 16:25

주영재 기자 jjy@kyunghyang.com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한국은 해방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뤘다. 국가의 꼴을 갖추려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왔지만 내용은 없이 형식만 갖춘 채였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장식이었고, 제도보다 밤에 이뤄지는 권모술수가 나라의 정치·경제를 좌우했다. 현실과 제도는 따로 놀았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재벌이 부를 독점했고, 보수정당과 결합해 준정당적 기능을 하는 족벌언론이 언론 행세를 했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사회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서구에서 수입한 이론으로 채운 '제도의 매뉴얼'에 불과했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 천착한 이론을 강조했다. 그렇게 나온 개념이 '압축적 근대성' '가족 자유주의' '변혁적 시민권' 등이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지상 목표로 세운 국가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복지 부담을 가족에게 지웠다. 그렇게 사회 재생산 역할을 담당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위기가 찾아왔고 자살과 독박 간병, 노인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 교수는 그 전환의 힘을 '시민권'에서 찾았다. 시민권은 시민들의 정치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장 교수는 거대 양당이 지역과 세대 등의 대립구도를 이용해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상을 재벌 일가가 순환출자를 고리로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일에 비유했다.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해 이들의 전횡을 견제해야 하듯, 시민은 '패싸움' 정치에 동원되지 않고, 사회연대적 실천으로서의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의 직접 행동을 강조했다. 정치적 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홀로 지게 된다면서 길거리에 나가 싸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수단과 물적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는 그 자체로 계급"이라면서 "헌법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듯, 청년도 자기보호를 위한 계급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시민권의 개념을 좀더 자세히 들려달라.

"정치인은 국민을 말하고, 시장은 시민을 말한다. 하지만 서구 자유주의에서 시민사회의 성원을 뜻하는 말은 국민이 아닌 시민이다. 우린 물리적·공간적 개념으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 부른다. 대신 시민에 해당하는 뜻으로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은 행정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시민(citizen)'이라고 말하고, 유럽의 공항에 가면 '유럽연합 시민'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시민은 자유주의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뜻이다. 서구에선 국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국가주의로 의심받고 정치적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정의하는 시민권은 자유주의 시민주권이다. 경제에선 자유롭게 경쟁하고, 일상생활에선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다. 시민주권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공동체가 국방 등 여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다른 공동체와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든 조직이 국가이고,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자유주의 시민주권을 대리하는 게 대

의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국가 기구 중 최종적 주권 기구는 의회이다. 한국도 그렇다. 대통령이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회사에 주주가 있는 것과 같다. 물론 1인 1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권과 달리 사적 소유에 비례한 권리라는 점에서 둘의 차이는 있다.”

-그 시민권을 행사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자유주의 시민주권으로서 시민권을 행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결국 정치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패싸움 구도에 동원되고 있다. 개인이 자유주의 시민주권을 행사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 선거와 투표다. 주권자 개인으로서 고민해 행사하는 권리이자의 무다. 호주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 지금의 정치는 거의 엔터테인먼트가 됐다.”

-코로나19로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가 뭘 해야 하고 내가 국가에서 무얼 보장받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 이 경험이 자유주의 시민주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QR코드가 그렇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동선추적에 활용하지만, 이걸 사용한다는 자체가 시민이 방역을 위해 이 정도는 협조하겠다는 상호 계약을 맺고 있음을 뜻한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대남과 이대녀로 접근해 해결할 수 없는데 정치인이 부추기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자유권과 정치권, 사회권이 3층 석탑을 쌓듯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화나 촛불집회로 자유권은 분명히 확보했지만, 우리가 유의미한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대선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유력 후보가 됐다.

“보수당은 실제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의 몰락으로 보수는 완전히 개인 야심가들의 집합체가 됐다. 보수 정당이라는 것의 인적구성을 보면 군인은 사라졌지만, 과거 독재 정치를 보좌하면서 독재권력을 함께 향유했던 검사와 언론인, 지역 토호들의 느슨한 연합체이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사실 민주당에서 오라 했으면 갔을 텐데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고 말했다. 바탕이 있고 뼈대가 있는 정당이라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그 정당에선 그런 말을 하는 후보한테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권력을 나눠갖는 게 중요하지 정당의 정체성이나 이념적 지향은 생각해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이 지역주

의로 표를 나눠 먹는 덕에 주류 정당이 됐다. 현재 검찰이 가진 권력은 한국 정치사의 파생상품이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에 기소권을 몰아줘 비대화시킨 것이다. 미국이 금융파생상품 때문에 망했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윤석열이 검찰주의자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굴욕감을 느낀 게 있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의무는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파생상품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586 용퇴론이 나왔다.

“보수가 워낙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형적인 것이니, 그 정당이 권력을 잡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자기 정당화로 굴러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기 선민의식은 강하지만 사회를 대표하는 차원에서의 체계성이나 역량은 별로 없다. 결국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청년들의 적이 됐다. 국가를 위한 과학적인 사회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당이 못하니 시민이 고통을 겪는다. 과거 ‘선성장 후분배’를 외치며 불평등한 경제발전을 했는데 그 과실은 재벌에 집중됐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벌은 세계화되어 고용은 남의 나라에서 창출하고, 일반 시민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

유주의적 미봉책에 의존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때도 청년이 물표를 줬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당이 국민에게 내세울 독자적 이념이 없어서 박정희 시대 기업가이자 박정희 딸인 3공 시대의 인물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그렇게 두 번 집권하는 동안 검사들, 특히 공안검사들이 권력을 대리 행사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기구를 동원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검찰 정권이었다. 얼굴마담을 내세우고 뒤에서 보수세력을 구성한 인물은 군사독재를 보좌하면서 권력을 향유한 전문가 집단이었다. 이번 대선은 다르다. 최초로 3공 인물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나선 굉장히 묘한 상황이다."

-선거에 나선 시민의 책임을 강조했다.

"세상에서 제일 비생산적인 게 주류 엘리트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혹시 그런 과오를 내가 범하진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보다 시민 주권자, 회사의 주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가지 비유를 들면, 재벌이 자기지분의 몇십 배나 되는 기업을 순환출자로 지배하는 걸 '기업지배 승수'라고 부른다면,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이 지역 대립 구도로 '정치지배 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찍을 인물이 없다고 한다.

"시민의 혼란은 시민권적 차원에서 이유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때는 박정희 시대의 개발주의적 시민권의 논리와 연결할 지점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논리성조차 없다. 정권교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이다. 자기네가 권력을 잡는 게 정권교체인데 잡아서 뭘 하겠다는 지 논리가 없다.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게 자기네에게는 의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지만 모든 사람의 소소한 민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사회집단의 요구 중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기후위기를 비롯한 시대적 의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지도 않는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순 없나.

“정치지배 승수의 최대 피해자가 사실 청년이다. 기성세대는 자영업자라도 할 수 있지만 청년은 그것도 없다. 지금 청년세대는 기후위기 등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던 문제들에 직면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담도 청년의 몫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토론을 요구하고 정치적 투쟁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이나 사회당 등 군소정당의 대표는 다 청년이었다. 청년 문제를 정치 세력화로 풀려는 시도였는데 주류 양당에 의해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면서 막혔다. 청년 정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시위하고 저항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만 노는 것은 게으른 짓이다. 오프라인 광장으로 나와서 자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환경문제, 노동문제, 재벌문제 등 부당하게 자기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어젠다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 그것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도약 계좌, 청년기초자산제 등 이번 선거에서 청년 구애가 두드러진다.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현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집권세력이 그때 가서 죽고 없는데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국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게 청년이다. 납세자가 부족하면 세금 더 내야 하고, 기후가 엉망이 되면 자기네가 감당해야 한다.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면 돈(위험프리미엄)이 오가듯이 같은 이유로 청년에게 사전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기후나 복지 문제를 두고 길거리에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 인류와 민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다. 힘을 합해도 기성세대의 이기심을 이길 수 없다. 계급 이론에 비유하면 현재 생산수단과 기타 물적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금 청년과 미래 세대는 그 자체로 일종의 계급이다. 따라서 계급적 행동을 해야 한다. 노조가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듯, 청년들이 현세대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적 연대로 주장하는 건 거의 헌법적 차원의 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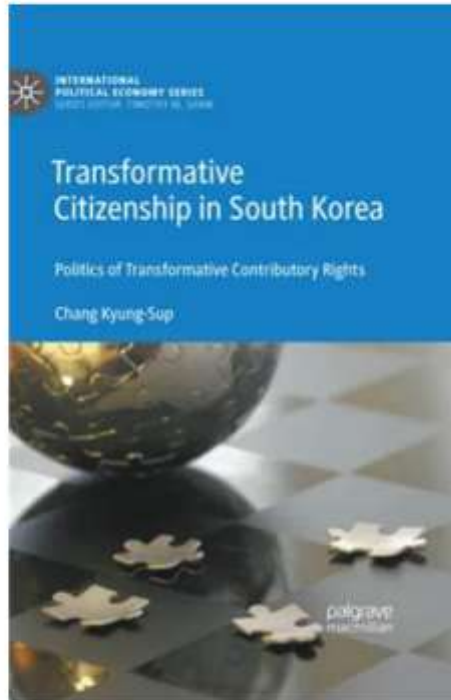
-공정 담론이 지배하고 있다.

“일단 입시와 취업이라는 경쟁 게임에 참여하면 시험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집합적 결과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역기능적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지역균형발전으로 들어온 학생을 공정하지 않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공정의식이 그 세대의 정체성이 돼선 곤란하다. 일자리나 사회적 자원이 희소해지다 보니 명품을 사러 줄을 서듯 청년이 공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에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공정한 시험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험을 보러간 모든 청년이 다 길거리로 모여서 왜 올해 이렇게 일자리가 줄었냐, 왜 우리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미래 리스크는 다 지게 하는 거냐 묻고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정성에만 집착한다면 그들 사이는 경쟁자로만 남고, 그 세대 내부는 원자화 되고 만다.”

시민권 연구 집대성한 영문 서적 출간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 사회제도의 급속한 설립과 변화를 겪었다. 장경섭 교수는 이를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해 유사한 경험을 겪은 동아시아 근대화 분석의 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자유주의 질서의 안정적 재생산을 가능케 한 ‘가족 자유주의’가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육아와 교육, 복지의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경제 발전을 위해 가족을 전략적으로 통제·동원했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런 구조가 잘 작동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위험이 가족에 전가되면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전환의 계기를 시민권에서 찾는다. 지난 2월 초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 팰그레이브 맥밀런(Palgrave Macmillan)에서 발간한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는 그의 시민권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시민권 연구의 권위자인 브라이언 터너 호주 가톨릭대 교수(전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가 추천사를 썼다. 터너 교수는 이번 장 교수의 저작을 두고 “시민권 연구의 유산을 일신하면서, 한국과 아시아 사회 연구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가 펴낸 이번 영문 서적의 제목은 '한국의 변혁적 시민권'으로 '변혁적 공헌 권리의 정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영문 저작을 냈지만, 그는 이번 책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성으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변화 그 자체가 국가의 목표가 된 결과물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응하는 자는 보상받고, 변화의 희생자들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논리에 기약 없는 보상을 기다리다 실업과 빈곤, 자살로 사회에서 이탈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가 붕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선성장 후분배처럼 '선성장 후안전'의 논리가 지배하는 위험 사회라고 평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위험을 당연시하고 위험을 내재화하는 공격적인 변혁(transformation)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위험을 안는 선택된 집단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줬다"면서 "그나마 실제로는 국가가 보험사 역할을 해 하나도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의 과정이 있을 때마다 희생집단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변혁이 성공하더라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여러 프로젝트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유착된 기업의 이해 중심으로 가면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문제이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면에서 구조적으로 사람이 도태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국가 중심적 필요가 아닌 사회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을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의 작업은 서구 사회 중심의 시민권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그 성과를 잇달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로 '제2회 최재석 학술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2010년 인문학 분야 유명 출판사인 루틀리지에서 출간한 <압축적 근대성의 한국(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의 중국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아랍권의 학술 중심인 모로코 왕립학술원에서도 아랍어 번역본을 내기로 했다. 시민권 연구의 중심 학술지인 '시티즌십 스터디스(Citizenship Studies)'는 장 교수의 최근 신간에 관한 리뷰 논문을 실기로 했다.

<한국일보> 저서출간 인터뷰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20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11572395360>

Today pick

“N포세대, 개인주의 아닌 가족에 떠 넘긴 복지 탕”

입력 2019-01-02 04:40

‘내일의 종언’ 낸 장경섭 서울대 교수

“만혼·저출산·노인문제 등 구조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화가 아니라

국가가 복지를 가족에 떠넘긴 탓



그림 1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압축적 근대화를 연구 화두 삼은 장경섭 교수는 “한국의 근대는 서구 제도를 광범위하게 축적 차용해 이른 일종의 ‘막פות 근대’라고 정의하며 “서구 제도가 갖는 사회 복리, 해방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기초부터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달 24, 26~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49.7%)가 긍정 평가(45.9%)를 앞섰다. 21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발생한 ‘데드 크로스’ 현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던 20대 남성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2017년 80%대의 20대 남성 지지율은 1년 새 29.4%까지(12월 10~14일 전국 2,509명 조사) 떨어졌다.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딸 하나는 있어야 한다’(44%)고 답한 사람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23%)고 답한 사람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응답자 2명 중 1명(46%)이 ‘결혼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63%)도 과거(2013년 79.9%, 2016년 71.3%)보다 줄었다.

흔히 페미니즘 열풍과 젠더 갈등으로 풀이하는 두 현상을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가 만든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압축적 근대화’론을 제시한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다.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근대화가 가족의존(착취)적 경제·사회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이 이론은 유럽·북미·아시아 각지에서 동아시아의 비교문화(한류), 가족·개인, 사회정책 연구에 활용돼 왔

한국일보_“N포세대, 개인주의 아닌 가족에 떠넘긴 복지 탓”

다. 장 교수는 최근 한국의 가족주의를 정교하게 분석한 책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집문당 발행)를 펴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장경섭 교수는 “가족 의존적 경제사회 체제는 한국인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결합해 장기간 지속됐다. 그 결과 만성적 가족피로 증후군이 나타났고 외환위기 이후 비혼과 만혼의 증가, 저출산, 노인자살 증가 등 가족 재생산위기가 구조화됐다”고 말했다. 가족자유주의는 한국 같은 비서구 사회가 서구의 자유주의를 사회 핵심가치로 채택하면서도 자유와 책임의 기본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서구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가족은 단순히 사생활을 영위하는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자유를 함께하는 공동체이자 정치·경제 활동의 최소 단위다. 이 사회에서 가족은 마치 기업처럼 구성원 개인의 교육, 주택, 금융(가족간 자원이나 유통), 경영(재벌) 활동에 광범위하게 ‘공격적으로 개입’한다.

이 독특한 가족주의를 유교적 전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장경섭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개발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며 생성된 ‘상황적 구성물’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한국이 애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유교의 ‘충’과 함께 강조한 개념이 ‘효’라는 주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유교적 가족문화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시어머니-며느리 사이 같은 가족 내 위계 갈등이 생긴다. 노비의 ‘공파 노동’이 없어진 시대에 “여성이 혼인 제도를 통해 가부장적 ‘유사 노비적 존재’로 교환”됐고, 가사와 돌봄 노동에 “여성 노동력을 공파로 동원하는 과정은 이들에 대한 ‘천대’로 이어졌다”.

가족 내 예법을 법률로 정리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된 게 박정희식 개발자본주의가 강력히 형성되던 1969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개정한 2015년 ‘건강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한다. 복지사회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돌봄 노동이 가족에게 전가된다.



‘내일의 종언’ 출간한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신상순 선임기자

외환위기 이후 가족은 기업처럼 스스로 구조조정(출산 혼인 기피)에 들어갔다. ‘결혼 기피, 출산 파업’으로 요약되는 작금의 가족 재생산의 위기는 개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 깊은 가족자유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최근의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N포 세대’의 좌절은 고용 주택 교육 문제의 중층적 압박 속에 (본인들이 꿈꾸는) 혼인과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는 (개인화된 게 아니라) 부모세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일보_“N포세대, 개인주의 아닌 가족에 떠넘긴 복지 탓”

현실적, 물질적으로 준비된 혼인과 출산을 당연히 여긴다.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간극이 세계 최악인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준비된 가족’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만혼 비혼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고용위기 등으로 아직 경제적 독립기반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족자유주의 질서란 중장년 부모에 대한 무기력한 의존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소득, 자산 양극화에 따라 이런 지원이 불가능한 부모가 급증하는 현실에 엄청난 불안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청년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여기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정규직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증하지만 가정 내 가사, 돌봄 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 비혼 증가의 배경이다. 장 교수는 “청년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어머니 세대에 불가능했던 개인중심의 ‘자유주의적 근대화’를 실천하고, 국가의 수용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아들을 통해 기대했던 세대 간 계층 상승 욕구가 딸을 통해서도 충족되면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양육과정의 정서적 보상감’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급격히 연장될 노후의 자녀와의 관계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부계(아버지·남편)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24%)는 사람보다 ‘모계(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36%)는 사람이 더 많았다.

작금의 현상을 바꿀 구체적 방안을 묻자 “임기응변식 정책 몇 가지로 타개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국가가 복지를 얼마만큼 담당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에게도 아동수당을 주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초적인 의료보험을 도입하는데도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문제는 박정희 시대에 ‘선성장 후분배’,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를 내세워 가족에게 복지를 전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분배가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 바뀔 때 마다 국가운영 철학, 정책이 바뀌고 그 후유증을 가족이 다 떠맡았잖아요. 국가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토론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우리 같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다른 나라들이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죠.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국가 재정이 건전한 걸 보면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한겨레> 저서출간 인터뷰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2009)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348773.html>

한겨레

문화 책과 생각

“한국은 가족에게 ‘육아·교육·부양’ 다 떠넘겨”

‘가족·생애·정치경제...’ 펴낸 장경섭 교수
‘가족피로’ 임계점 도달...이혼·저출산 등 초래
국가가 해야 할 사회투자기능 제대로 수행을

신소명 기자

수정 2009-04-08 21:03

등록 2009-04-08 21:03

어머니 열풍이다. 소설과 드라마, 연극을 가릴 것 없다. 10여년 전 ‘아버지 신드롬’에 견줄 만하다. 시절이 수상한 탓이다. 위기가 엄습할 때마다 본능처럼 살벌이에게 기대는 것. 한국의 가족주의는 그만큼 뿌리 깊고 유구하다.

“전지전능한 모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모순투성이 사회질서를 지탱하고 급격한 사회변화를 견디게 만든 게 한국의 가족인데,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위기로 삶이 뿌리째 흔들리니, 잊고 있던 모성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 거기에 기대고 또 위안받고 싶은 것이죠.”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사진)는 최근의 ‘엄마 신드롬’을 사회적 위기 국면마다 작동하는 가족 의존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했다. 삶이 버거울 때마다 가족을 호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족주의에 기초해 일궈온 압축적 근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얘기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최근 출간한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창비)라는 책에 담아냈다.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한국의 근대화는 24시간 기계 돌리듯, 가족을 풀가동하는 ‘가족 동원 체제’에 의존해 이뤄졌습니다. 인적자원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과 부양의 역할을 가족에게 맡겨둔 채 국가는 모든 자원을 성장과 고용 창출에 집중시켰던 것이죠. 말하자면 국가나 사회가 떠맡아야 할 짐을 가족들이 대신 짊어졌던 셈입니다.”

한국의 가족이 떠맡았던 이런 기능을 장 교수는 ‘사회투자 가족’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재분배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 주력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사용한 ‘사회투자 국가’란 개념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개인들 역시 본인뿐 아니라 자녀나 형제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가족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구성원의 사회적 성공이 전체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투자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과중한 짐이 지워지다 보니 가족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됐다는 점이다. 장 교수는 그 징후가 근대화에 따른 서구 가족이념의 유입과 함께 나타난 뒤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왔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변화의 압축성과 복합성인데, 그 결과 상이한 시공간에서 형성된 다양한 가족이념이 한국인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부양·보호 기능을 부과하는 유교적 가족이념에 가족 성원의 성공을 위해 자원을 쏟아부을 것을 장려하는 도구주의 가족이념과 서구에서 유래한 개인주의·서정주의 가족이념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가족 의존적 사회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인들의 ‘가족 피로’를 가중시키게 된 것이죠.”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 이은 급진적 구조조정은 한국인의 ‘가족 피로’를 임계점까지 밀어붙였다. 결국 상황은 이혼과 만혼, 독신, 무자녀, 저출산 등과 같은 전방위적인 가족 해체와 탈가족화로 폭발했다는 게 장 교수의 진단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틀렸어요. 문제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가족 의존적 정치경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게 계속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 가족뿐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가 사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교수는 이런 위기의 징후로 공교육 붕괴와 급증하는 자살률을 꼽았다.

“대안이요? 육아와 교육, 노인 부양 등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사회화해야지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 피로를 덜어줘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미루고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미풍양속을 내세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미풍양속마저 사라지는 법입니다.”

장 교수는 최근의 탈가족주의화가 개인주의 사회의 도래를 가져올 것이란 ‘상식적’ 기대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개인주의는 오랜 사회·경제·문화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는 문명적 구성물인 만큼, 복잡한 적응과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심각한 문화적 갈등과 혼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전망이다.

“가족중심주의는 해체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개인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국사회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가족에 닳을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어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노숙자가 되고 자살을 합니다. 정부의 발상 전환이 아쉽습니다.”

글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HOME > 뉴스 > 학술연구

장경섭 서울대 석좌교수의 『압축적 근대성』, 중국 출판문학상 수상

김봉익 | 승인 2025.08.18 14:30 | 댓글 0



중국 '단상제 서점 문학상' 2024년도 작품상 공동 수상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현대화 경험이 중국에 시사점 제시"
오는 10월 8일엔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특별 저술강연도



장경섭 서울대 석좌교수의 '압축적 근대성' 저서 시리즈가 중국과 미국, 아랍지역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현대화 경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원작부터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2022년 출간), '압축적 근대성의 위험'(2025년 6월 출간), 중국어판 '압축 현대성의 한국'(2024년 1월 출간), 중국어판 '압축 현대성의 논리'(2025년 7월 출간) 표지다.

지난해 1월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장경섭 서울대 석좌교수(사회학과)의 저서 『압축 현대성의 한국』(壓縮現代性下的韓國)이 중국의 출판·문학상인 '단상제 서점 문학상'(单向街书店文学奖)의 2024년도 작품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 책은 중국 청화대학 국제지역연구원의 기획·번역 사업으로 2024년 장쑤인민출판사(江苏人民出版社, 상해)에서 출간됐다.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장경섭 교수의 2010년 원저 『압축적 근대성의 한국』(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런던/뉴욕: 라우틀리지)을 중국인 교수 2명이 번역한 것이다.

Kyosu Job
교수초빙·연구원모집·강사모집·대학원생모집

- [총장초빙] 한동대학교, 제8대 총장 ...
- [교수초빙] 국방대학교 교수 초빙 ...
- [교수초빙] 계명대학교 2025학년도 ...
- [포상공고] 경암교육문화재단, 2025 ...
- [교수채용] 한국전문문화대학교 20 ...
- [모집공고] 국회 연구직공무원(연구 ...

기사더보기 >

국립공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2025학년도
수시·정시·모집
2025. 8. 18(월) ~ 8. 22(금)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처 | 원서접수처: 입학처 | 입학처: (주)인하인하 | 입학처: (주)인하인하 | 입학처: (주)인하인하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원서접수: 2025. 9. 8.(월) ~ 9. 12.(금)

한동대학교
총장초빙
접수마감 : 2025. 08. 29(금) 18:00까지

第十届单向街书店文学奖获奖名单



지난해 1월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압축 현대성하의 한국』은 '단상계 서평 문학상' 2024년도 작품상을 공동 수상했다.

『압축 현대성하의 한국』은 지난해 출간 즉시 초판이 매진돼 인문학서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 최대 도서사이트 당당왕(当当网)의 신간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었다. 중국의 주요 지식·사회·경제 매체인 <신루이 저우바오>(信睿周报, The Thinker), 완멘(晚点, LatePost) 등은 장교수와 특별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는 개혁·개방에 따른 급진적 사회변동에 직면한 중국에 대해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현대화 경험이 증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학술·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 1 점술에 빠진 대한민국... 나의 미래를 알...
- 2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및 지역...
- 3 장경섭 서울대 석좌교수의 『압축적 근대...
- 4 클릭 한 번으로 세계를 열다...이젠 디지...
- 5 김포대 야구부, 제59회 대통령기 전국대...
- 6 중앙대-육사 연구팀, 영어매개수업(EMI) ...
- 7 회사 안 다녀본 교수, 진로를 말다
- 8 송실대 GTEP사업단, 세계 최대 뷰티 박람...
- 9 "일본 문학으로 제국·식민지의 관계 새롭...
- 10 경북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임영웅 팬클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수신문 공동기획
[더보기 >](#)

고용노동부
교수신문 공동기획
[더보기 >](#)

실시간 뉴스

- 한서대, 방위산업진흥협회와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 원광대 교육발전특구사업단, '노 모바일' 감성 충전 캠프' 성료
- 『강원대학교 홍보대사 '가은' 12·13기 연합 워크숍』 개최
- 국립창원대 운영 창원시 I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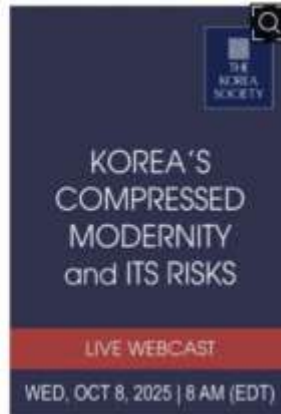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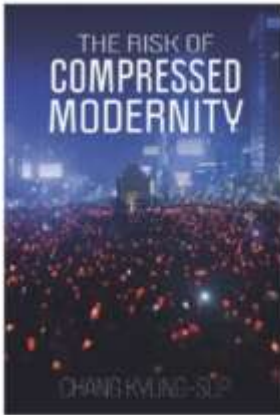
장 교수의 저서 '압축적 근대성' 시리즈의 중국어 번역출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화대학의 번역사업을 이어받은 중국 절강대학 아시아문명연구원은 장 교수의 2022년 후속 저서인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케임브리지/뉴욕: 폴리티프레스)의 중국어 번역판 『압축 현대성의 논리(壓縮現代性的邏輯)』(장쑤인민출판사)를 지난 7월에 출간했다.

또한 올해 6월에 출간한 장 교수의 저서 『압축적 근대성의 위험』(The Risk of Compressed Modernity, 케임브리지/뉴욕: 폴리티프레스)도 같은 출판사와 중국어 번역출판 계약이 체결됐다.



장 교수는 현재 후속 저서인 『중국: 압축적 근대성과 그 결과』(China: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Consequences, 케임브리지/뉴욕: 폴리티프레스)를 집필 중이다.

- 국립부경대, 2025년 8월 정년퇴임식 개최
- 경남대, 제37회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 메달 3개 획득



장경섭 서울대 교수는 최근 출간된 『압축적 근대성의 위험』과 관련해 오는 10월 8일 미국 코이아 소사이어티 특별 강연을 한다.

한편,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도 장 교수의 압축적 근대성 관련 저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최근 출간된 『압축적 근대성의 위험』(2025)과 관련해 오는 10월 8일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과 그 위험'이라는 주제로 장 교수의 특별 강연을 연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2023년 초에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2022)와 관련한 특별 저술 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장 교수의 '압축적 근대성'에 대한 관심은 아랍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4월 모로코 왕국학술원의 초청으로 방문해 그 산하기관인 고등학술번역원을 통해 그의 저서 『압축적 근대성의 논리』의 아랍어판 출간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무상 배포 계획에 합의했다. 장 교수는 "이 지역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대화 및 발전 노력에서 한국이 롤모델로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학술·정책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Tag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 #중국 출판·문학상 수상 #코리아 소사이어티 #근대성의 논리 #근대성의 위험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억

다른기사 보기

HOME > 뉴스 > 학술연구

장경섭 교수 '압축적 근대성' 이론 화제

최익현 기자 | 승인 2015.01.05 15:29 | 댓글 0

"장경섭은 탈사회주의 전환사회들의 독특한 성격들을 모아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라고 명명하고,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의 체제 전환이 서유럽이 아닌 남유럽과 동아시아와의 수렴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학술출판사인 브릴 아카데미 퍼블리셔에서 출간한 한 책의 편저자 서문 내용이다.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과)의 '압축적 근대성' 이론이 빛을 본 순간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오랫동안 현대 한국사회의 문명적 성격을 압축적 근대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 장경섭 서울대 교수

그의 이론은 일본 교토대 교육·연구 세계화 프로그램에 중심 학설로 채택됐으며, 이렇게 진행된 국제적 연구 성과가 최근 브릴 아카데미에서 두 권의 편저로 출간됐다.

편저자의 한 사람인 오치아이 에미코 교수도 "장경섭은 한국의 근대성을 압축적 근대성이라고 분석하는데, 유럽의 장기간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근대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익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해외 학자들, '개념 창시자'로 소개

☞ 최익현 기자 | ☎ 승인 2015.01.05 15:34 | 💬 댓글 0

장경섭 서울대 교수의 '압축적 근대성' 이론 화제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현대 한국사회의 문명적 성격을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내용(경험)적으로 구체화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장 교수는 국내를 넘어 영문저서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Routledge, 2010), <*British Journal of Sociology*>(2010년 10월 특집호) 등에 핵심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압축적 근대성'은 그동안 유럽·북미·아시아 각지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교문화(한류), 가족·개인,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중심적 이론으로 활용돼 왔다. 그의 영문저서는 출판 직후 덴마크 왕립도서관에 의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압축적 근대성의 가족(주의)적 기초와 한계에 관한 그의 연구는 좀 더 눈길을 끈다. 이 연구는 일본 교토대의 교육·연구 세계화 프로그램(Kyoto University Global Center of Excellence on 'Reconstruction of the Intimate and Public Spheres in 21st Century Asia', 2008-2012)에 중심 학설로 채택됐는데, 이에 따라 장 교수는 관련 학술행사, 공동연구, 교육에 적극 참여해 왔다.

장 교수에 따르면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근대화는 가족 의존(착취)적 경제·사회 체제를 기초로 했고 이는 한국인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결합해 장기간 지속됐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만성적 가족피로 증후군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혼, 저출산 등 가족의 재생산위기가 구조화됐으며, 특히 지난 세기말 경제위기 이후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의존적 압축적 근대성에 수반된 가족 재생산의 위기가 가족가치적 위기 혹은 개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사회, 개인의 지속적 가족주의에 기초하는 것임을 분석했다.

그런 장 교수의 학설을 채택한 교토대의 국제적 연구성과가 최근 브릴 아카데미퍼 블리셔(Brill Academic Publisher)에서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장 교수의 이론이 깊이 반영된 두 편서는 Family and Social Change in Socialist and Post-Socialist Societies: Change and Continuity in Eastern Europe and East Asia(Edited by Zsombor Rajkai, Ritsumeikan University)와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Edited by Ochiai Emiko, Kyoto University, and Hosoya Leo Aoi, Ochanomizu University)다.

편저자인 줌보 라예카이는 서문에서 "장경섭은 이러한 이론 장에서 탈사회주의 전환을 생산과 재생산에 관련된 (압축적인) 이중적 자유화라고 정의하고, 이 전환사회들에 있어 정치경제적 제도로써의 가족의 자유주의적 재설정을 설파한다"라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개는 오치아이 에미코의 편저에서도 반복된다. 에미코는 "이 책 전체에서 아시아적 근대성을 다루는 데 있어 핵심개념인 압축적 근대성을 이 개념의 창시자인 장경섭이 1장에서 설명했다."

장 교수는 "나의 학설이 중심이 돼 진행된 교토대 교육·연구 세계화 프로그램의 국제적 공동연구 성과를 담은 두 편서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인 'Brill Academic Publisher'에 의해 최근 출판돼 연구자로서 무척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주된 관심 분야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익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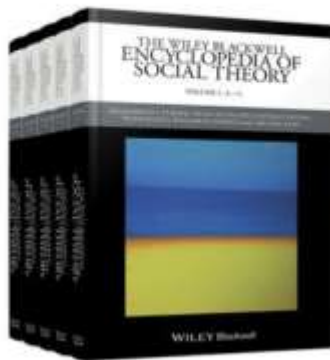


HOME > 뉴스 > 학술·연구

고전-현대까지 850여개 항목 최대 사회이론 간행물 출간

윤상민 | 승인 2017.12.18 12:10 | 댓글 0

사회이론 간행물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발간



‘압축성 근대성’ 이론을 설파해온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과)가 Bryan Turner 전캠브리지대 석좌교수, Cynthia Epstein 뉴욕시립대 석좌교수(전 미국사회학회장) 등과 공동으로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전 5권, 2천864페이지)를 편집해 이번 달에 출간했다.

이 책은 모두 5권 850여개 항목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의 역사상 최대 사회이론 간행물로서 고전, 현대, 최신 사회현상 및 이론을 포괄한다. 장경섭 교수는 전체 공동편집인 및 근대성·식민성·발전문제 섹션과 아시아 사회이론 섹션의 편집 책임자 역할도 함께 맡았다.

남북한과 관련한 주제 및 집필자는, 민중(이남희), 재벌(김은미), 유교근대성(김상준), 압축근대성(장경섭), 분단체제론(장경섭), 주체사상(김성경) 등도서기(윤승주) 등이다. 아울러 중국, 일본, 동아시아 일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지역 학자들의 적극적 의견 반영과 집필 참여를 바탕으로 포함됨으로써 세계 인문사회과학계에 동아시아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섭 교수는 오랫동안 현대 한국사회의 문명적 성격을 ‘압축적 근대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의 이론은 일본 교토대 교육·연구 세계화 프로그램에 중심 학설로 채택됐으며, 이렇게 진행된 국제적 연구 성과는 지난 2015년 세계적 학술출판사인 브릴 아카데미에서 두 권의 편저로 출간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압축적 근대성’은 그동안 유럽·북미·아시아 각지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교문화(한류), 가족·개인,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중심적 이론으로 활용돼 왔다.

그의 '압축적 근대성'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압축적 발전과 근대화는 가족의존(착취)적 경제·사회 체제를 기초로 했고 이는 한국인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결합해 장기간 지속됐다. 장 교수는 그 결과 한국인들에게 만성적 가족피로 증후군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혼, 저출산 등 가족의 재생산위기가 구조화됐다고 본다. 특히 이 현상은 지난 세기말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족의존적 압축적 근대성에 수반된 가족 재생산의 위기가 가족가치적 위기 혹은 개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사회, 개인의 지속적 가족주의에 기초하는 것임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상민 학술문화부 기자 cinemonde@kyosu.net